

전북 · 충남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과제



· · · · ·



(전북발전연구원)

전북·충남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과제(안)

I. 서론

1. 공동협력 강화의 필요성

지방자치제하에서 모든 지자체들은 각자 자გი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될수록 주민의 권리의식 증진과 지역간 경쟁현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간 마찰이나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소지도 점차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이 지자체간, 지자체와 주민간의 갈등과 분쟁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지역과 주민의 생활환경내지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가운데 가장 큰 파급효과를 발휘하는 성격인 지역발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 관련사업들은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간 갈등이나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흔하여 지역적으로나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므로 광역지자체간 공동협력을 위한 성숙된 의식이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달성에 전력해야 할 때이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다핵분산형 국토구조의 형성 및 도시와 농산어촌의 균형발전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같은 환경변화속에 충남은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성장의 동기가 부여되었고, 전북은 신행정수도의 인접권으로서 신행정수도의 배후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자 전력하고 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통해 ‘지역간의 통합’을 도모하고, 각 지역이 저마다의 개성과 특성을 살린 발전기반을 확보하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를 계획의 기조로 삼고 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신행정수도의 건설, 지역혁신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 지방화를 통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과 상생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간 교류와 연계를 통한 협력적 국토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합’과 ‘대약동’을 유도하는 국토혁신의 지향을 계획의 2대기조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특히, 복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효과를 미치는 지역개발사업 등의 적극적인 발굴과 공동추진을 활성화하고 지자체간 공동발전 및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제도의 우선지원 규정을 적극 활용하고자 위해 수정계획에서는 지자체간 협력사업의 발굴 및 원활한 추진을 주요 전략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광역지자체도 이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야말로 단일 시·도차원을 초월하여 두 광역지자체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광역계획, 지역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인 개발사업을 선정·제시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대에 선 것이다.

2. 공동협력의 적절성

국토의 서남부지역에 위치한 전북·충남은 여러 측면에서 공동연대감을 가질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놓여 있었다.

예컨대, 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4대권으로 수자원개발을 중요시하여 구분되면서 금강권역으로 분류된 바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전북과 충남의 상당지역이 전국 10대 광역권 가운데 전주·군장광역권의 동일권역으로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토 중부권의 동일한 역사문화권에 속하여 왔으며,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수도권 지향형의 국토정책으로 인하여 전북 등은 국토 동서축 연결보다는 남북축 지향형으로 인프라 등이 중점 연계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지역적 특성을 갖는다. 또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벨트 개발, 환황해권시대 신행정수도의 관문이자 대중국 역할분담 주체로서 전북과 충남은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북·충남은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북·충남(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를 통해 교류를 돈독히 해 왔다.

이제 충남에 신행정수도가 건설됨으로서 국토 중부권의 다양한 역사문화에 대해 재조명되고 가치인식이 높아지게 될 것이며, 따라서 동일 백제문화권과 금강연안문화권으로서 공동협력은 더욱 제고될 것이다.

이에 올해 네 번째 교류협력회의에서 합의된 공동협력사업은 양 도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내포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충남지역에 건설될 신행정수도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합의하였으며, 전북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 충남이 전라북도

< 1> 2004 「 . 」

「충남·전북교류협력회의」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화합과 협력의 기본 바탕 아래 상호 공동방안을 토의하면서 양 도간 백제문화권 종합개발, 장항공단 조성사업 활성화, 금강 하구둑 쓰레기 공동처리 및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공동건의 등 획기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충남·전북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한 교류·협력방안을 마련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제4회 교류협력회의」에서 합의된 군산철새축제, 충남관광홍보관 설치운영, 부여지역 문화예술축제 참가협조,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공동노력, 탑정호 유입쓰레기 저감방안 공동추진, 2004군산자동차부품엑스포 참가협조 등 새로운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2. 「제1~3회까지의 교류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안건 중 양 지역간 교류·협력하기로 한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등은 적극 추진하고,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나 공식답변이 없는 국토 77호 군·장대교 건설, 충남·전북간 국도 확·포장사업 등 주요사업의 조기시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공동방문단을 구성하여 중앙에 재차 건의한다.
3. 양 도는 정부가 지난 7월 5일 발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를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행정수도 입지의 최종확정, 행정수도 예정지에 대한 지정·고시 등의 과업을 계획된 일정대로 반드시 이행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수도권 일각의 신행정수도 이전 반대 논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속화되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간다.
4. 2014년 동계올림픽의 전라북도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이를 통해 양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2004년 7월 12일

충청남도지사, 전라북도지사, 논산시장, 군산시장, 금산군수
익산시장, 부여군수, 완주군수, 진안군수, 서천군수, 무주군수

유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통해 양 도의 지역경제 활성화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양 지역은 이상의 동질 여건외에도 지역발전 부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원조달부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열악한 재정여건에 놓여 있으며, 인구규모도 190만명 내외로 유사하며 200만명의 심리적 수준이 무너져 인구성장에 대한 관심 등에서 매우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취약한 재정여건과 인구감소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은 인접 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해 추진될 때 대형 국책사업은 그 실현성을 높이고 투자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역간 상생의 길이 국가경쟁력 향상의 첩경이 된다는 의미에서 전북·충남간 공동협력의 강화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II. 협의 안건 추진실태 및 공동과제 선정

지난 2년간 양 도는 지방화시대에 생산적인 공동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화합과 상생의 발전을 추구해 왔으며, 최근의 국내 환경변화에 대처하면서 전북과 충남이 국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에 공동대처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도의 연구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협력도 이의 일환이며, 따라서 그간 추진되어온 협의안건을 중심으로 안건목록과 관리계획을 통해 공동발전을 위한 주요 협력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004년 7월 제4회 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까지의 상정안건과 제3회 교류협력회의까지의 협의안건 관리계획 종합내용은 <표 2>, <표3>과 같다.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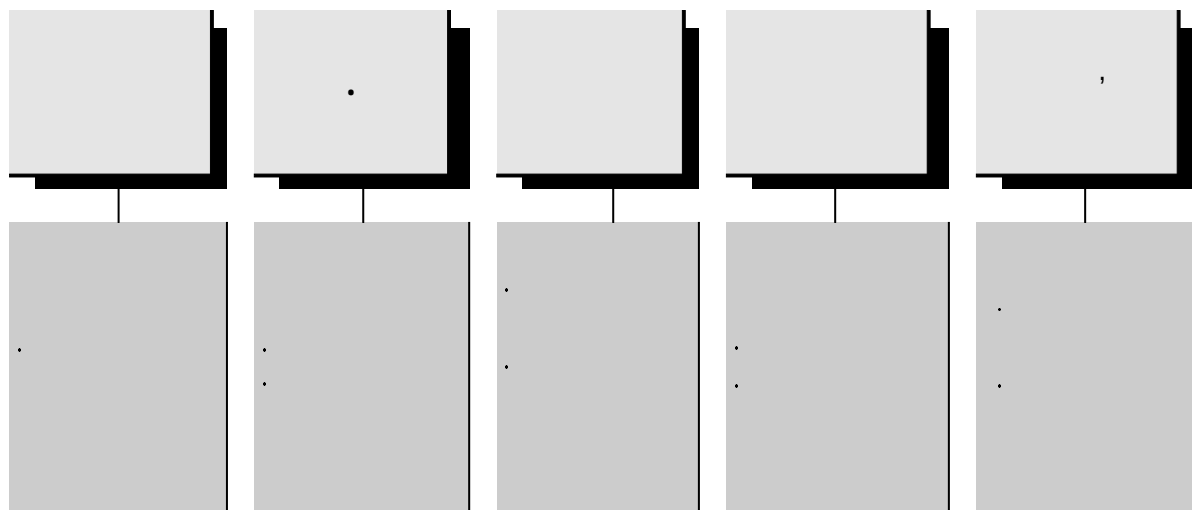
구 분	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계	20	10	-	4	6
중앙 협조·건의 사항	10	7	-	2	1
도차원 교류 협력사항	6	1	-	2	3
시·군단위 교류협력사항	4	2	-	-	2

		1	2	3	4
	20	10	-	4	6
I. 공동방문단 구성 재건의	2	2			
1) 충남·전북간 국도 확·포장사업 공동대응		■			
2) 국도 77호 「군·장대교」 건설		■			
II. 지속점검 추진	9	6	-	3	
1)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활성화		■			
2)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공동 대응		■			
3) 「공동조업구역」 조정 및 어업질서 확립		■			
4)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조기확정		■			
5) 「금강하구둑」 쓰레기 공동대처		■			
6) 「금강수계규제지역 수계관리기금」 지원 확대		■			
7) 꽃게 금어기 규정 개정				■	
8) 남이 건천리~운주 산북리간 도로 확·포장				■	
9) 군산~서천간 국도 4호선 도로연결				■	
III. 정상추진	3	2	-	1	
1) 「대둔산 도립공원」 협력관리		■			
2) 배티재 주변 공동개발		■			
3) 야생조수 보호 공동대처				■	
IV. 신규사항	6				6
1)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공조체제 구축					■
2) 군산철새축제 「충남관광홍보관」 설치·운영					■
3) 부여지역 「문화예술축제」 참가협조					■
4)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 공동노력					■
5) 탐정호 유입쓰레기 저감방안 공동추진					■
6) 「2004군산자동차부품엑스포」 참가 협조					■

그간 추진되어온 사항들의 절반은 중앙의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이며, 그 다음은 도 차원의 지역간 상호협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순이다.

총 협의 20개 안건가운데 중앙건의 사항중 미 회시된 안건(2건)은 공동방문단을 구성하여 재건의하며, 도·시군간 협력과제중 미진한 안건(9건)은 지속·점검하여 추진하고,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정상·추진되고 있는 안건(3건)은 종결·처리하였으며,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공조체제 구축 등 6건은 신규 제안된 사항이다.

이상의 대상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금강 등 수계관리, 문화·관광, 산업경제, 지역행사 연대 등 거버넌스 구축, 행정수도 및 국토계획 부문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당면한 과제로 구체화하면 <그림 1>과 같다.



< 1>

Ⅲ. 공동발전을 위한 주요 협력과제

1. 금강수계 하천환경 및 경관 조사·분석

1) 개요

금강은 전북 장수군 뜰봉샘에서 발원하여 충북 옥천 부근에서 노령산맥을 가로질러 지류인 미호천과 합류한 후 노령,차령 양 산맥 사이를 남서로 유하하여 군산·장항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하천이다. 이에 금강은 절반이 충청남·북도에 그리고 전북 약1/4, 경북, 경기도 일부에 걸쳐있다.

유역의 지형은 대부분 해발 100m이하의 저지대이나 일부지역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로 되어 있으며 년평균 강수량은 1,269mm이지만 연간 강수량의 65.5%가 우기(6-9월)에 집중하면서 하천유황의 변동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인 하상계수(최소 유량

/최대유량)는 약 1:300로 외국의 하천에 비하여 불안정한 유황을 갖고 있어 치수 및 이수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속에 하천의 이수 및 치수 기능이 강조되어, 하도의 선형정비, 양안의 제방 축조등의 토목공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하천의 이·치수 기능은 적극적으로 확대된 반면에 환경적 기능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하천경관이 파괴되고,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훼손되는 등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하천환경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친수성 야생·동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기능 및 경관 기능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자연형 하천계획기법, 하천공간정비기법 개발 등 하천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천의 형성과정은 주로 침식, 운반, 퇴적의 작용에 의해 일어나며, 자연상태의 하천은 이러한 작용에 의해 하천경관이 변천해 가는 것이다. 하천에 있어 하상의 형태는 유수체계(fluvial system)가 반영되어 나타나며, 유수체계는 하천경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작용하고, 하천 생태계를 안정시켜 보다 다양한 생물종 조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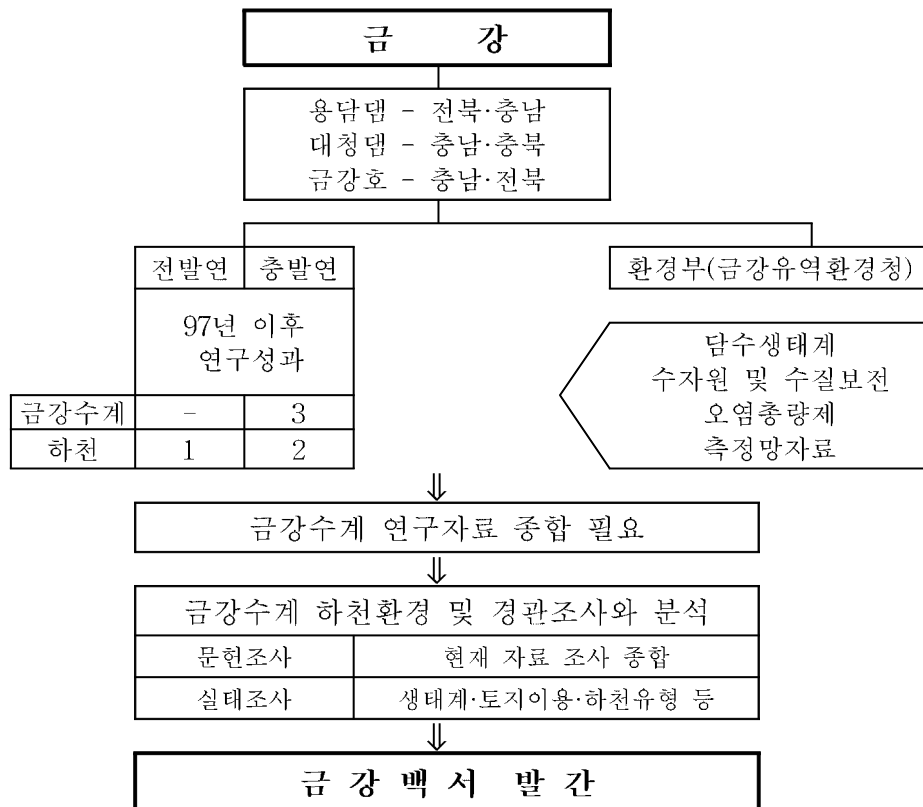
따라서, 생물종 다양성 및 야생 동·식물서식처 제공을 위한 하천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으로의 활용, 개발계획에 따른 기초자료 구축 등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어 금강수계의 하천현황 및 경관을 파악하는 현황조사 및 분석이 시급하다.

2) 필요성

현재까지 금강수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금강에 인접해 있는 전라북도 및 충청북도내 시·군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각각의 연구들이 종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에서 금강수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나 연구들간의 연계성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행된 금강수계에 대한 연구들을 문헌검색을 통하여 정리하고 하천수질오염 측정망 설치 이후의 수질자료들의 종합·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3) 추진전략

- ① 금강수계 주요 하천 및 주변 환경 등 하천경관을 조사항목에 따라 조사한다.
- ② 이를 기초로 금강수계 내 하천의 특성 및 변화 원인을 파악하며, 금강수계 하천 경관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경관 유형별 현황도를 작성함으로써,
- ③ 금강수계에 대한 하천 현황자료를 제공을 가능케 하고, 금강수계의 효율적인 하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백제문화권 공동협력

1) 개요

충남은 백제고도를 중심으로한 백제문화권역을 역사·문화·교육·관광·휴양기능으로 특화하여 한국적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국제적 관광지로 육성하며, 금강문화권과 내

포문화권을 연계하여 역사·문화·녹색관광 벨트로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백제문화권개발에 따른 기 수립된 개발계획은 자치단체간 협조보다는 사업 추진 주체별로 추진되어 체계적이지 못한 발굴, 보존, 활용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이전 등을 통해 양질의 관광객들이 확보될 것에 사전 대비함에도, 빈약한 프로그램이나 자원으로는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제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이 인식되고 있다.

충남과 전북은 백제문화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자원 발굴, 복원, 연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백제문화 자원의 개발을 통해 역사문화관광 부문발전의 기회로 삼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하는 시점에 있다.

2) 필요성

관광객들의 성향에 어우러지는 자원을 개발하는 공동전략의 마련이 문화관광부문의 상생을 추구할 수 있다. 이에 백제문화에 대한 복원은 자치단체 단독보다는 공동으로 개발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일례로, 현재 공주에서 부여간, 부여에서 익산간의 연계체제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익산방문객은 익산에서 귀가하고 공주나 부여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익산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충남과 전북의 경계지점을 상호 연계시키는 연결 고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백제문화자원의 연계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광역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3) 추진전략

○ 백제문화유적지 관광자원화

- 자원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관광객들에게 공동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 공동로컬투어버스를 통한 백제역사 한마당 제공

- 합리적인 관광루트와 코스를 활용한 상품제공
- 양 도간 공동 관광상품 개발 판매
- 서해안권 관광벨트 공동대응
 - 충남의 태안반도, 안면도와 전북의 변산반도, 새만금, 고군산군도의 기능간 상호 보완적 전략수립
- 금강수계권 관광자원화
 - 수변 및 수계를 활용한 여가공간 조성
 - 야간 관광객 유인대책(유람선 등) 마련
 - 양 도의 공동화합의 장(축제 등) 마련
- 지역간 마케팅전략 수립
 - GIS를 활용한 관광정보 공동제공 방안
 - 주요 관광지에 양 도 관광자원 홍보시설 설치

3. 관광산업 활성화(서해안고속도로주변을 중심으로)

1) 개요

참여정부는 문화관광산업을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삼고자 18대 문화관광 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지방분산책과 의미를 같이하는 국민제안을 통해 복합관광레저단지(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5일근무제도 도입으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 시간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경부고속철도 및 호남고속전철의 개통 등은 관광기회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자체간 관광산업을 지역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광역지자체간 네트워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개발의 효과를 증대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양 지역간의 관광산업부문의 활력제고를 위한 현안사업의 공동 발굴 및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시기이다.

2) 필요성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해안지역의 접근성이 매우 향상되었으며, 지역개발 및 산업부문에 상당한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측면에서 국내 관광객의 주요 방문지인 강원도, 제주도, 부산지역으로 이동하던 관광객들을 서해안지역으로의 이동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최근 서해안지역의 개발과 환황권시대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제3차충청남도 종합계획에서 서해안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해양자원과 내포문화권을 연계한 국제교류지대로 형성하는 방향도 설정되어 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인접지역(충남 2시 3군, 전북 2시 2군)의 주요 개발계획으로는 아산만권신산업지대, 태안반도는 거점관광지로, 안면도권은 해양레저스포츠 거점지대, 군장산업단지권, 고군산군도의 국제해양관광단지, 부안군 변산반도의 4계절형 종합 휴양거점 관광지 개발 등이 수립되어 있다. 지역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역간의 공동전략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치단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효과는 대단히 부진한 실정에 있어 접근체계상 전북과 충남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고속도로를 통해 인접지역으로 유도 방문할 수 있는 공동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3) 추진전략

- 관광지개발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교류사업
 - 상호 양 도(道)간 필요한 관광개발에 대한 정보와 자료 공유
 - 양 도(道) 인접지역간 관광개발이 필요할 경우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 난 개발방지를 위한 관광지 개발 환경피해 사례 정보교류 및 대응책 강구
- 관광상품 판매에 필요한 공간 확보 및 지리정보 체계 공유
 - 고속도로 휴게소나 지역상품 판매장소에 관광상품이나 지역특산물 공동판매대를 설치하여 홍보 실시
 - 고속도로 및 관광지에서 관광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양 도의 관광지 안내체계 구축

- 양 지역 관광안내소 및 안내원 교육강화
 - 양 도 관광안내소에 관광홍보물 비치 및 제공
 - 양 도 안내원에 대한 상호 관광정보교육 강화
 - 양 도 관광종사자 교류근무(주요 관광안내소내 근무)
- 양 지역 산업체 투자시 최대 인센티브 제공
 - 투자지역 정보 우선적으로 제공
 - 국·공유지 우선 제공 및 제도적 허용한도 내 인센티브 제공
 - 각종 인센티브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우선 지원
 - 필요시 세금감면 및 할인 실시
 - 기업유치에 필요한 정보 상호교류 및 안내 제공
- 상품프로그램 및 관광가격 공동대응 실시
 - 양 도 지역주민의 유료 관광지 방문시 일정금액 할인제도 실시
 - 상호 공동맞춤형 관광상품과 코스 개발(상품코스에 따라 정상금액과 할인금액을 제시하여 가격 경쟁력과 관광의 편리성을 공동으로 홍보)
- 양 도(道)간 공동로컬시티투어버스 운행
 - 양 도(道)간 공동시티투어를 운행하여 타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
 - 상품공동 개발 및 홍보공동 실시
- 서해안관광벨트 공동수립
 - 해안지역에 대한 해양관광벨트 구축과 양 도 방문 관광객에 대한 정보제공실시
 - 나아가 해양과 내륙, 내륙과 내륙간의 공동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상호보완적인 벨트화 구축

이상의 실행전략의 구체화를 위해 양 연구원간 상호 공동연구가 가능한 과제를 예시하면, 전북·충남 영상산업 활성화 연구, 전북·충남 금강지구 생태공원계획(군산과 연계개발 가능), 전북·충남 생태공원 네트워크구축(서산+군산), 전북·충남 관광인증제 및 맞춤형관광자원 개발, 전북·충남 전문인력 교환 연수프로그램, 전북·충남 관광정보시스템 공동 활용방안, 전북·충남 테마별 관광네트워크 구축방안 등을 들 수 있다.

구분		전라북도	충청남도	공동협력 가능성
추진 목표	문화	▪ 전통문화산업 육성	▪ 게임·애니메이션, 영상미디어산업	-
	관광	▪ 현대적인 자원 개발	▪ 서해안축 :관광클러스터 조성	-
사업 내역	문화	▪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육성 -태마한옥마을 조성 -구도심문화공간조성 -전통장인 육성 -서예박물관 건립 -전통한방 문화센터 -전통음식촌 조성(전주맛촌조성) -공예공방촌 조성 ▪ 체험문화관광인프라조성 -오감체험박물관 조성 -영상예술체험(심진강시네마촌 조성) -영상예술체험(부안) -소리문화체험 -마백문화체험(익산서동문화파크) -생활, 건강, 체험테마파크조성 -생활, 건강체험(한방체험단지) -생활, 건강 레포츠체험 -완주허브파크랜드조성 ▪ 전통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육성 인프라조성 -전통문화보존 전승 -문화예술창작육성 -문화예술콘텐츠(판소리세계화)	-게임·영상산업 협력단(신규) -충남 게임·애니메이션 아카데미(신규) -영상문화산업 교육센터(신규) -게임·영상산업 특화기술개발사업 지원(신규) -국제게임트레이드쇼(사이버 전국대전) 개최(기존) -충남 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 산·학 협력센터(신규) -문화콘텐츠 산·학 협력 및 창업지원 시스템(신규) -영상미디어산업사업화지원센터(기존) -VGF(버추얼게임팩토리)체계 구축(신규) -디지털콘텐츠 진흥원(신규) -HD-TV기술지원센터(신규) -영상콘텐츠 Data Bank 센터(신규) -천안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기존) -영상·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조성(기존) -천안밸리 배후단지 조성(신규) -게임·영상산업 집적화(신규) -충남 디지털문화콘텐츠 특별구역 조성(신규)	영상산업부분 에 대한 상호 공동연구
사업 내역	관광	▪ 지역관광자원개발 -내도지구 외 ▪ 맞춤형체험관광상품 활성화 -문화관광자원의 프로그램탈굴 및 네트워크구축 -관광상품디자인구축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육성 ▪ 문화관광산업 연구지원 - 전북문화진흥원설립 및 운영 -문화산업정책개발연구 지원 -전통문화콘텐츠개발 -디지털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 통합네트워크 구축 -문화관광정보교류 -인전교류(전문인력양성) -인적교류(문화산업단지) -DB구축(문화예술정보교류/공동 장비활용) -경영 및 교육장비지원 -평가	▪ 테마·체험형 관광자원 개발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기존) -안면도 증장지구(대부초지) 관광지 조성(신규) -서산A·B지구 : 철새도래지 생태공원 조성(기존) -서해안(당진, 보령, 서천) : 생태·체험관광 -금강 생태공원 조성(신규) -충남 Sea Food Fair 관광 상품화(신규) ▪ 지역문화자원 관광 상품화 -내포문화권 종합개발 조성(신규) -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신규) -백제역사 재현단지 조성(기존) -세계역사문화엑스포 개최(신규) -지역축제의 세계화(기존) -기벌포 문화권 개발(신규) -기지사 줄다리기 유형화사업(신규) -서천 성경전래지 성역화사업(신규) ▪ 관광서비스 질 제고 -충남 관광인증제 실시(기존) -관광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신규) ▪ 관광정보 콘텐츠 및 관광정보시스템 구축 -충남 관광정보시스템 구축(신규) -권역별·테마별 광역 관광협력체계 구축(신규) -관광산업 관·학 협력체계 구축(신규)	-

4. 지식기반산업 벨트조성(서해안고속도로주변을 중심으로)

1) 개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가 주도하는 지식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식의 창출과 확산, 활용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경제시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고, 지식이 모든 경제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 핵심요소가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또한 선진국 경제의 경우 최근 지식기반경제로 이행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특징 중 하나는 지식기반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확대됨으로써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식기반산업의 생산비중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지식기반경제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창조적 지식국가 구축’을 21세기 국가 장기발전의 비전으로 천명하고, 금년에는 ‘지식기반의 확충’을 국정지표로 삼고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은 그 성격상 경제구조의 장기적 구조변화와 지식기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토대 위에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갖추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관념적·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전북과 충남을 대 중국 교두보이자 지식강국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지역으로 육성되도록 전북과 충남이 공조 체제를 형성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2) 필요성

전북지역과 충남지역은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제 세계화 속에서 지역 성장엔진을 보유하기 위한 전북과 충남의 공조

체계 구축을 통해 발전을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북과 충남이 공조체계 형성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을 적절히 해 내지 못한 기존의 산업발전전략을 수정하고 전북과 충남지역의 고유성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비교우위를 유지해 가기 위한 지식기반산업의 새로운 발굴·육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북과 충남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이 어떤 것이며 이들을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전북과 충남 지역에 적합한 지식기반산업을 선정함에 있어 주된 고려 대상의 기준들은 지역의 부존자원의 최적 활용, 2차 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타 산업에의 전·후방 연관과급효과, 부가가치효과, 타 지역과의 비교우위의 유지 가능성,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 등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과 충남은 서로의 공조체계를 통한 지역의 물리적 접근도로와 교통망을 확충하고 지식기반산업들의 입지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기반 신산업에 대한 특화된 지원제도 및 육성기금 등을 설치, 특히 이들 산업 내 유망전략 지식 기반기업을 발굴하여 각종 자금배정 및 행·재정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 지원하고 새로운 지식기반 신산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산업 전문 인력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는 지식기반산업발전계획 수립에 기초한 연구로서 지식기반산업과 관련된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전북과 충남지역의 지식기반산업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지식기반산업 벨트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3) 추진전략

(1) 지역간 지식산업벨리 조성

지식 관련 산업은 특정분야의 전문 업체들이 일정한 공간에 다수 집적하여 전문적 생산네트워크를 갖춘 전문적 산업지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집적지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기반집적지의 성공조건은 입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근 각 지역별로 지식기반 집적지의 성공과 실패현상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입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식기반 집적지의 입지조건으로는 대도시 또는

그 주변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도시로부터 원거리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과 행정수도 중심지역에 위치한 충남과 전북은 지식기반 집적 입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북과 충남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지식산업밸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산업의 하부구조 구축

지식기반 집적지는 도로-항공-정보망과 같은 물리적 하부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들 산업의 하부구조는 지역전체에 네트워크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바,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대부분의 지식기반 집적지가 국제공항, 항만,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아울러 첨단고속통신망의 거점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북과 충남지역은 서해안고속도로와 기타 간선도로 등이 잘 갖추어져 있고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식기반 메카로 성장해 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3) 지역간 정보망 구축

지식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는 정보통신망이다. 교통망과 함께 정보통신망은 지식의 확산과 전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전북과 충남이 지식기반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 관련 지역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전북과 충남이 지역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생산시설, 생산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국가정보망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북과 충남 지역간 산업을 지역 정보망에 연결시키는 것은 지역 활성화의 주역인 기업들에게 생산 및 판매지원, 산업클러스터의 효과적 구축, 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전북과 충남 도민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 제공 등과 직결된다.

(4) 지역간 생산네트워크체계의 구축

전북과 충남의 지역간의 생산네트워크 관련 기업, 관련 전문서비스업체 등 특정 분야의 전문기업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상호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대학,

연구기관, 실험실 등 학습 및 연구개발네트워크의 생산 네트워크 활동들도 연계가 필요하다.

전문적 생산네트워크는 이 업종 교류(동일 장소에 첨단 기술산업·연구소·기업·대학·금융기관 등이 집적되어 용이한 상호접촉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혁신을 촉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벨트를 유도하는 상승효과)를 통한 지역간 클러스터 계획의 근거로 삼고 있다.

전북과 충남의 생산 네트워크의 조성을 통한 지식기반벨트를 조성할 경우 기존의 생산제조업체를 중심으로 백화점식으로 기업을 입주시키는 기존의 산업단지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관련 전문기업들이 창업하여 성장할 수 있는 전문화된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지역의 기업, 대학 및 연구원의 공동 연계프로그램 강화

지식관련 정책과 집적지 조성사업 중에서 크게 국가주도형, 지방정부주도형, 민간기업주도형, 대학주도형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 지자체, 기업,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이 성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전북과 충남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관련 대학과 기업에 대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확대해 나아가야 하며, 대학과 기업간의 공식적 내지 비공식적인 산학 연계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초 과학기술 연구부문에 대한 공공투자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6) 지역간 공동 지원 시스템 구축

지식관련 집적지의 성공요인 중에서 전북과 충남의 공동지원은 지식기반산업의 벨트 조성에 중요한 요소이고, 전북과 충남이 지식기반 집적지의 조성 및 지원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지역 경제구조 변화, 고용창출,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전북과 충남이 지역의 지식기반산업을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북과 충남의 관련기업 및 관련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파트너십을 끌어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공동지원센터”내지는 “전북·충남 지역협력연구센터”를 권역별 중요 거점지역에 설립하는 등 지식기반 산업 기술에 대한 특화연구 및 과학기술기반 확충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제시가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자동차부품산업 생산 및 연구개발 협력네트워크

1) 개요

전북과 충남에는 현대, 대우, 기아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의 완성차 공장들이 입지해 있다. 양 지역에는 이들 완성차 공장과의 연계성을 가진 부품업체들이 집적되어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산 및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자동차부품산업의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2) 필요성

전북과 충남지역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산업이 발달해 있는 바, 전북의 경우 전주에 현대자동차 상용차공장이, 군산에 GM대우승용차 및 대우상용차 공장이 각각 입지해 있으며, 이들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기업들이 전주, 익산, 군산지역에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아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서산에 동희오토의 완성차업체가 입지해 있으며, 이들 완성차 공장을 중심으로 아산 및 서산지역에 자동차부품산업의 집적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전북과 충남의 자동차부품 산업은 상대적으로 인천이나 울산 등 자동차산업 집적지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고,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성능부품 생산업체보다 벌크부품 생산업체의 비중이 높고, 기업 규모가 영세하며 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역량이 낮은데에 기인한다.

따라서 전북과 충남지역간의 자동차부품산업의 생산네트워크 구축 및 연구개발

협력 강화는 양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양 지역의 생산네트워크 형성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전북 및 충남의 자동차 및 기계관련 연구소와 TIC 등 기업지원기관들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활용한 연구개발협력 강화는 양 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과 충남 자동차산업 집적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자동차산업 집적지인 전북의 전주, 익산, 군산지역과 충남의 서산, 아산지역 간의 교통이 크게 개선되어 접근성이 매우 높아졌으며, 이러한 접근성의 향상은 두 지역간의 상호 연계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3) 추진전략

- 양 연구원의 전북 및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실태분석 및 상호 협력 분야 도출
 - 자동차부품산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전북과 충남의 자동차부품산업 특성 분석
 - 상호 협력 가능성을 검토 및 검토결과를 기초로 두 지역이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문 도출
- 중점 협력 분야 및 방안 연구
 - 전북과 충남지역 자동차부품사업의 중점 협력분야에 대해 양 연구원이 공동으로 집중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세부 협력방안 마련 및 실행전략 제시

6. 과세 자주권 확대

1) 개요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정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충남과 전북은 전형적인 낙후 지역으로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현안 사업의 추진과 발굴 등에 수도권 및 타 자치단체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분권형 재정운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세 자주권의 확충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외세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신 세원을 개발하여 재정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따라서 지방재정 구조가 비슷하고 재정력이 약화되고 있는 양 도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행정수요, 공동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과 동시에 자립적 지방화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자주재원 확보방안과 신 세원 발굴 등에 관한 연구 사업의 교류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구조 형성을 위한 공동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2) 필요성

재정자립도가 유사한 전북(25.6%)과 충남(29.2%) 지역은 인구 유출 및 산업 구조가 취약한 지역으로 재정력이 열악한 상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체의 성숙과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주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 및 재정 구조가 유사한 양 도가 신세원 발굴 및 수요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원 확충 방안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통령(04.8.12)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과세권을 지방에 넘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충남과 전북에 산재한 부존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 관광세 또는 원자력방사선세 도입 방안 등 다양한 세원을 연구하고 정부 및 국회에 적극 건의함으로써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정하고 안정적인 행정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3) 추진전략

양 도의 과세 자주권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연구를 시행하면서 첫째, 양 도 행정기관간의 정보 교류 추진 둘째, 민간단체 및 대학간의 공동 심포지움 개최 등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법정외세 도입을 위한 과세자주권 강화 방안’, ‘지역개발세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과세자주권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

7. 안전한 도시 만들기

1) 개요

전북과 충남은 인접 지역으로 각종 재난,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상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 및 재해, 안전 불감증 등의 문제에 공동대처하여 안전한 전북과 충남도시 만들기 사업의 전개를 위한 공동협력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금강을 중심으로 한 재난, 재해 방재 시스템 및 시설의 구축은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심포지움 개최, 민간교류확대, 주변지역간의 응급구조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국제적인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 형성이 가능하도록 양 도가 공동 노력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2) 필요성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생활 주변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들이 성장됨에 따라 안전의식의 고취와 안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 교육과 안전 도시로서의 시스템을 성숙시키기 위해 전북과 충남간의 민간 및 행정기관간의 교류, 연구사업의 발굴 및 국제적 안전 도시 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충남과 전북간의 금강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재난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난·재해 방재시스템의 구축과 시설 확충 등에 대한 공동 협력 체제의 구축이 요구된다.

3) 추진전략

양 도간의 안전한 도시 만들기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행방안으로 첫째, 전북과 충남간의 안전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안전교육 및 문화의 정착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발굴 둘째, 금강 주변 재난·재해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전한 도시 형성 셋째, 충남과 전북 주변 지역간의 응급구조 시스템 상호 협력체제 구축 넷째, 양 도 민간단체간의 교류 촉진을 통한 안전 도시 만들기 운동 전개 등을 들 수 있다.

8. 수도권 관리방안과 국토계획 공동사업

1) 개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기능의 가속화가 지속되지 않도록 신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연계하여 추진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수도권을 동북아 중심도시권으로서 발전을 선도하는 1중심(서울) 및 2거점(인천·수원) 도시로 육성하고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4대 특성화 벨트로 육성하는 공간구조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기조는 공장 총량제 등 현행 억제기조를 유지하면서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산업 클러스터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신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고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 계획’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토록 되어 있다.

2) 필요성

신 행정수도건설 등 지방분산책은 국토균형발전에 기조를 둔 정책임으로 수도권의 규제 합리화는 수도기능의 지방분산과 자립형 지방화와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관리되는 ‘시차적 연동화’ 전략의 필요성과 실천이 관건이므로 전북과 충남이 이에 대해 공동 대처하도록 한다.

즉, 행정수도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완료되는 시점에 비로소 비수도권지역의 성장을 궁극적으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신 행정수도 건설 본격화나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가시화 되는 시점’ 등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을 명확한 시기가 담겨있는 구체적 로드맵 설정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공주·연기지구의 신 행정수도건설은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과제로 입주 및 안정된 성장이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행정수도 입지결정지역인 충남은 물론이거니와 지방분산책으로 성장을 유도하려는 전북이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성장 기회요인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행정수도 건설 등 국내환경 변화요인과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계획인 만큼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자체간 협력사업가운데 전북-충남(충남-전북)간 공동 협력사업은 양 지역간의 협력사업가운데 수정계획 수립기조와 직접 관련되는 중점사업들이어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3) 추진전략

< 5> 4 () - (-)

구분	전략	방향
충남	신행정수도의 성공적 건설 협력	▪ ‘충남-전북교류협의회’를 통해 충남과 전북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상호협력
	서해안권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	▪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서해안 연접 5개 자치단체(충남-경기-인천-전북-전남)가 참여하는 ‘서해안 시도지사협의회’ 활성화
		▪ 서해안 개발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서해안관광벨트구축, 광양-수도권 연결 철도망 건설
전북	지리적으로 인접한 자치단체간 협력	▪ 백제문화권개발을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관광상품공동개발, 관광벨트화, 공동관광마케팅 등)
		▪ 타 도 인접 자치단체간의 협력(군장대교와 연결도로건설, 금강하구 철새서식환경 조성, 수산종묘 공동방류 등)
	공동체적 연원에 근거한 공동사업 추진	▪ 전북-충남간 백제문화권개발사업 추진과 서해안 종합관광벨트 등 인접 충남지역 관광자원과 상호보완적 정비·개발
		▪ 공동발전방안의 토의를 위한 ‘전북-충남교류협력협의회’와 공동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양 도의 연구원 협약
	전주-군장광역권 개발을 통한 서해안지역 기능 제고	▪ 군산, 장항, 새만금지역의 생산교류 거점역할 수행을 위한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행정수도와 연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 신행정수도와 연계강화를 위한 남북 3축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 전북-충남-(신행정수도)
		▪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통합성 증진을 위한 군장대교 건설 및 국도 확·포장사업 추진

: • , 4 (),
(-)

- 1단계 : 단기
 -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는 한편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 합리화 추진
- 2단계 : 중기
 - 수도권 공간구조 재편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적 성장 관리를 위해 권역개편 및 간접 규제방식에 중점
- 3단계 : 장기
 -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여 수도권 정책을 지자체의 자율적 성장관리체제로 전환



- 1단계 : 신 행정수도 건설 및 입주완료 시기(~2015)
- 2단계 : 신 행정수도 안정 성장단계(2016~2020)
- 3단계 : 신 행정수도(비수도권)와 수도권의 동반 성장단계(2020~)

< 2>

()

IV. 결론

국가는 인접 광역자치단체 등이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노력할 경우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성격을 부여하므로 사업 실현성 확보차원에서도 양 도의 공동협력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양 광역자치체는 교류협력회의를 통해 신 협력시대를 견고 있다. 전북과 충남이 생산적인 공동발전방안을 토의하고 추진함에 있어 전북발전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은 교류·협력·건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계획(action plan)을 공동연구를 통해 마련한다면 협력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해당년도 양 도간 교류협력회의를 통해 제안된 안건가운데 사안이 상대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을 선정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연구결과를 교류·협력·건의토록 한다.

공동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및 공동연구의 진행은 양 연구원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만이 실천력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

발 행 일 2004년 8월 31일

주최 및 주관 전북발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560-82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66 KT빌딩

전 화: (063)276-2060 팩 스: (063)276-2069

홈페이지: www.jd.re.kr
